

주간 규제 정보

Vol. 232

2019. 02. 25 ~ 2019. 03. 03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자율주행차 선진 5개국, 한국에서 기술·표준 전략 논의.....3
2.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4
3.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5
4. kg, A(암페어)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6
5. 국표원, 어린이가방·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8
6. 중소·중견기업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10
7. 표면처리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11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8. (미국) 식품의약품청, '수입식품 안전성을 위한 전략' 발표.....12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9.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28개 물질 추가.....13

KOTRA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7월 1일부).....14
11. 美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20
12.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22
13. 인도네시아, 2019년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참관기.....25
14. 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 법 제정.....30
15. 수단, 국가 비상사태 후속조치로 4개 긴급 명령 발표.....33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자율주행차 선진 5개국, 한국에서 기술·표준 전략 논의

- 『한미독일영 자율주행차 선도기술 및 표준 국제컨퍼런스』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2월25일(월) 국내외 자율주행차기술및국제표준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차 선도 기술 및 표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주자인 한·미·영·독·일의 자율주행차의 국가별기술개발·표준·법제도·실증·인프라등에 대한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국제컨퍼런스 개요 >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 일시 및 장소 : '19. 2.25(월) 13:00~18:00 / 엘타워(양재동)
- 참석자 : 자율주행차 업계, 연구소, 학계의 기술 및 표준 전문가 200여명

○ 특히, 미국(Shladover, 버클리), 독일(Leonhardt, 아우디), 일본(Hiyama, 혼다) 전문가 등은 자율주행차 국제적인 기술·표준 전문가로서 자국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여한 핵심 전문가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자율주행차 핵심 선도국인 미·영·독·일과 표준화 등 국가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이들 주도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 그간 미국은 자율주행차 심포지움(AVS: Automated Vehicle Simposium), 일본은 총리실 혁신 프로그램(SIP) 주최로 매년 자율주행차 기술·표준·실증 등 주제로 행사를 주최해왔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을 주도하는 현대자동차(류남규 이사)의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장스토리”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국 등 5개국의 주요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붙임 1,2)

* 자율차 안전성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한 표준화 중요성

○ 5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자국의 자율주행차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완전한 자율주행차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주요내용 : 표준화·기술개발·실증·법제도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 도출

- (Keynote, 현대차)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현장스토리
- (미) 자율주행차 정의, 단계 등 자율주행 레벨관련 표준개정 동향

(독) 고레벨 자율주행차(3~4단계)의 안전성 향상 프로젝트 동향

(일) 혁신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주행차 민관협력 사례

(영)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경험과 자율주행차 로드맵

(한) 자율주행차 고장시 자동주차방식 표준개발 현황 소개

□ 또한, 토론회에서 고레벨 자율주행차(3~4단계) 상용화를 촉진을 위한 국가별 중점적 표준화 추진대상과

기술개발·표준화 추진체계 정보를 교환했다.

○ 최근 상용화가 시작된 자율주행택시의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과 대중의 수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된 선도국 자율주행차 표준·기술·실증 정보는 국내 자율주행차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우 국표원장은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협력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로 동 행사가 국제 협력이 가속화 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제공조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2.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 등 어려운 색이름 바뀐다

- 국가기술표준원,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 알기 쉽게 표준 개정 -

◆ 진갈색은 어떤 색일까? 갈색보다 진한 색일까? 아니다. 진갈색 색연필을 칠해 보면 밝은 갈색이 나온다.

◆ 크롬노랑색은 무슨 색일까? 크롬색과 노랑색의 중간인가? 색이름을 봤을 때 어떤 색인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크롬노랑색은 바나나색이다. 카나리아색은 어떤가? 카나리아 깃털이 선명한 노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색을 유추하기 어렵다. 카나리아보다 일상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레몬색이 낫지 않을까?

◆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등은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색이 아니다. 학생들이 쓰는 색종이, 크레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등 문구류에 사용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애매모호한 색이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이 문구류 색채 대한 표준을 개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색종이, 크레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등 문구류에 사용되는 색이름을 알기 쉽고 자주 사용하는 우리말 표준 색이름으로 변경한다.

○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문구류 산업표준(KS) 7종*을 개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KS 개정 문구류 : 색종이, 크레용 및 파스, 그림물감, 색연필, 마킹펜, 분필, 색연필 및 샤프연필에 사용되는 심 등 7종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소장 박영경)와 함께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구류 7종의 색이름 현황을 조사했으며, 우리말 색이름 표준(KS A 0011, 물체색의 색이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색이름 456종 중 172종을 변경했다.

○ 이번 표준 개정으로 크롬노랑색, 카나리아색, 대자색처럼 이름에서 색채를 쉽게 유추할 수 없었던 색이름이 각각 바나나색, 레몬색, 구리색으로 보다 알기 쉽게 바뀐다.

- * 크롬노랑색 → 바나나색 카나리아색 → 레몬색 대자색 → 구리색
 - 연주황은 살구색, 밝고 여린 풀색은 청포도색,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 등으로 수정된다.
 - * 연주황 → 살구색 풀색 → 청포도색 녹색 → 초록 흰색 → 하양
- 또한, 진갈색(→밝은갈색)처럼 실제 색이름과 차이가 있어 문구류 업계와 교육계는 물론, 디자인 업계에도 혼란을 유발하는 색이름은 실제 색채에 부합하는 색이름으로 수정했다.
- * 진갈색 → 밝은 갈색, 진보라 → 밝은 보라, 진녹 → 흐린 초록 등
- 이번 문구류 색이름 개정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색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수행해 온 국가색채표준화 사업의 성과다.
- 이번 표준 개정으로 산업계와 교육현장에서 색이름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우리말 표준색이름의 올바른 사용과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국가기술표준원은 '03년도부터 색채관련 KS 정비를 시작으로 한국표준색표집, 한국표준색이름 통합본, 표준색이름 디지털 팔레트 등을 제작·보급하는 등 국가 색채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07년도에 “색동코리아”라는 로고를 선정하여 국가 색채표준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색채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색채를 정립함으로써 모호한 색채표현을 정비하고, 정확한 색이름 소통을 통해 산업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 문구류 색이름 KS 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계, 교육기관 및 소비자에 지속적으로 홍보·전파하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3. 안전하게 운동하자,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산업부(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마련하고 제품 안전확인신고 의무화 -

-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복지를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 (야외 운동기구 종류) 온몸역기올리기, 하늘걷기, 마라톤운동, 다리뻗치기, 자전거, 온몸노젓기, 몸통운동, 옆파도타기 등 (붙임2 참조)
-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 * (세부 안전기준(안))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

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수입 품일 경우)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27.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되면,

○ 소비자들은 야외 운동기구로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제품에 표시된 운동지침, 주요 기능, 안전상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되며,

○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구매하여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4. kg, A(암페어)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월 27일(수)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단위(SI)*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제단위계(SI, 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미터법을 기준으로 1960년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국제표준으로 확립한 단위 체계로 초(s, 시간), 미터(m, 길이),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 칸델라(cd, 광도)가 SI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BIPM(국제도량형국)에서 주관하는 총회로,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지난 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μg)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_A)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되었다.

< SI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단위 (기호, 명칭)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시간 (s, 초)세슘 전이 주파수 ($\Delta\nu_{Cs} = 9\,192\,631\,770\text{ Hz}$)를 이용

길이 (m, 미터)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c = 299\,792\,458\text{ m s}^{-1}$)를 이용

질량 (kg, 킬로그램)플랑크 상수 ($h = 6.626\,070\,15 \times 10^{-34}\text{ J s}$)를 이용

전류 (A, 암페어)기본 전하 ($e = 1.602\,176\,634 \times 10^{-19}\text{ C}$)를 이용

온도 (K, 켈빈)볼츠만 상수 ($k = 1.380\,649 \times 10^{-23}\text{ J K}^{-1}$)를 이용

물질의 양 (mol, 몰)아보가드로 상수 ($N_A = 6.022\,140\,76 \times 10^{23}\text{ mol}^{-1}$)를 이용

광도 (cd, 칸델라)단색광 시감효능 ($K_{cd} = 683\text{ lm W}^{-1}$)를 이용

□ 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 반영

▷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

▷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설 삽입

▷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non-SI units)*"이외에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단위(non-SI units)**를 추가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circ}$),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개 non-SI 단위

** 해리, 노트(kn), 바아(bar), 옹스트롬(\AA) 등 4개 non-SI 단위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해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5. 국표원, 어린이가방·학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19.1~2월)하였으며

○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2.28일)

□ 이번 안전성조사는 '19년 안전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8.4% 임

○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미술용품(크레파스·그림물감·색종이·점토류 등)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사용하는 학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 아동용 가방,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등의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 등기구 등)을 조사하여

-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22개 제품을 리콜조치 하였으며, 리콜 비율은 각각 14.1%, 12.1%임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51개) >▶ 어린이제품(18개) : 아동용 섬유제품(8개), 학용품(6개), 유아용섬유제품(1개), 완구(1개), 어린이용가죽제품(1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 생활용품(11개) : 서랍장(3개), 속눈썹 열 성형기(3개), 헬스기구(벤치프레스 2개), 합성수지제 욕실바닥 매트(2개), 건전지(1개),

▶ 전기용품(22개) : 전기찜질기(6개), LED등기구(5개), 전기방석(4개), 전기매트(2개), 가정용 소형 변압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전기스탠드(1개)

□ 리콜명령 대상 51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제품) 가방, 신발 등에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는 등 총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6개 품목, 18개 제품) >

- 아동용 섬유제품(8개) : 카드뮴(1.8~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7~158.1배)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학용품(6개) : 납(2.5~136.6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78.3~272.4배) 초과
- 유아용 섬유제품(1개) : 폼알데하이드(7.8배) 초과
- 완구(1개) : 납(1.6배) 초과
- 어린이용 가족제품(구두 1개) : 납(4.9배) 초과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1개) : 납(3.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5.0배) 초과

○ (생활용품) 서랍장에서 전도시험 부적합이 발생하는 등 총 11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생활용품(5개 품목, 11개 제품) >

- 서랍장(3개) : 안정성 (전도 발생)
- 속눈썹 열 성형기(3개) : 온도상승
- 벤치프레스(2개) : 바벨의 회전안정성 (전도 발생)
- 욕실바닥매트(2개) : 납(28.2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178.9배) 초과
- 건전지(1개) : 카드뮴 (3.0배) 초과

<참고 : 유해물질 인체 노출 영향>

-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전기용품)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 22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전기용품(1개 품목, 22개 제품) >

- 전기찜질기(6개) : 온도상승, 이상운전, 소비전력
- LED등기구(5개) : 전기적세기,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전기방석(4개) : 온도상승
- 전기매트(2개) : 온도상승, 소비전력
-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 절연내력, 온도상승
- 직류전원장치(1개) : 온도상승
- 조명기구용 컨버터(1개) : 감전보호, 내습성 및 절연, 전기적 세기
- 전기스탠드(1개) : 전기적강도,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였음

○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임

○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출처(국가기술표준원)

6. 중소·중견기업 수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한다

- 국표원·중기부, 전국 순회하며 「해외기술규제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2월 28일(목)부터 전국 14개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를 순회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2월 28일(목)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을 시작으로 3월 13일(수)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역별로 열린다.

< 합동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19.2.28(목)~3.13(수)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대표(CEO) 및 수출담당자 등
- 주요내용 : ① '19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안내, ② 해외인증 제도 안내, ③ 무역기술장벽(TBT) 최신 동향 및 대응 전략 설명,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사업 설명, ⑤ 국내 기술규제 개선활동 및 기업지원정책 소개

□ 국표원과 중기부는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제 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각종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 국표원은 최근 해외 기술규제 동향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정책, 국내 기술규제 관련 해소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 또한, 설명회장내에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가 현장 상담소를 개설하여 국내외 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중기부는 합동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시 평가에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TBT)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해외 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확대 실시('18년 224건 → '19년 300건)하는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 따라서, 규제정보가 부족하거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상담전화(1381 또는 www.knowtbt.kr)로 연락하기를 요청하면 된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7. 표면처리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 표면처리기술(ISO/TC107)*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

* ISO/TC107은 6대 뿌리산업 중 하나인 표면처리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승우)은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충남온양에서 8개국 60명의 표면처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표면처리기술의 국제표준화회의(ISO/TC107)를 개최하였다.[붙임1참조]

○ 동 회의에서 한국의 재료연구소는 자동차용외장부품* 등의 크롬도금에 적용되는 부식측정기술을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2참조]

* 라디에이터그릴, 범퍼몰드, 사이드몰드, 램프몰드등 크롬도금이 된 부품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관 :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표면처리기술사협회, 선문대학교
- 일시/장소 : 2.25(월)~2.28(목) / 온양관광호텔(충남 아산)
- 참석자 : 영국, 독일, 일본, 핀란드, 중국 등 8개국 금속표면처리 전문가 60명

□ 자동차의 외장 도금부품은 겨울철의 제설용 소금인 제설염에 의해 부식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사들은 각사 기준대로 표면처리업체에게 도금을 맡기게 되어, 표면처리업체는 작업 불편 및 생산단가 상승의 애로를 겪었다.

<그림 : 자동차용 외장부품의 도금 및 부식 사례>

○ 이는 제설염에 의한 부식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그 간 도금에 대한 국제표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료연구소는 부식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식방지의 능력(내식성)을 예측하여 적정한 도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크롬도금부품의 제설염부식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이번 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였다.

* 제설염의 산성화에 따른 공기부족 현상이 부식의 원인이므로, 동일한 산성화 조건에서 내식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식액 조건을 설정하고 시험절차를 규정

○ 자동차사별로 차이가 나던 표면처리 방법을 국제표준화하게 되면, 도금관련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표면처리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표면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표면처리업체의 애로사항을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총회에는 폭스바겐, 닛산 등 자동차 관련업체와 현대제철, (주)MSC 등 표면처리 관련업체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DLC(Diamond Like Coating), ▲발전설비의 열차폐 피막(Thermal Barrier Coating)에 대한 열전도도 측정방법 등 총 31종의 국제표준을 논의하였다.

□ 이외,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오염으로 니켈-크롬 도금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무전해 니켈-인-세라믹 복합도금의 요구사항 및 평가기술(’18.1월,전문대제안)”과 “화성피막 처리된 코일 등의 마찰계수 시험방법(’17.2월,현대제철제안)” 등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뿌리산업인 표면처리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국내개발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고 표면처리 관련기업들의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켜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8. (미국) 식품의약품청, '수입식품 안전성을 위한 전략' 발표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인 '수입식품 안전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19.2.25.)했음

○ 미국은 전체 식품 공급의 약 15%(200개 이상 국가)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식품안전 향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입식품에서 예방가능한 수준의 식인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입식품은 물량의 다양성, 공급 체인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출국은 식품안전체계가 다르므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복잡함.

○ 이에, FDA에서 발표한 전략은 수입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 감시 도구를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다음 4가지 사항을 목표로 두고 있음.

- 1. 수입식품의 미국 식품안전 요건 준수
- 2. 안전하지 않은 식품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FDA 국경 감시
- 3.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프로그램

붙임 : FDA Strategy for the Safety of Imported Food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9.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28개 물질 추가

2019년 1월 14일,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는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에 28개의 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영문명	분자식	CAS번호 / 일련번호
1	A mixture of glycosylated trehalose and hydrogenated starch hydrolyzates	No	738602-93-2
2	(1R, 2S, 2'S, 4R)-1,7,7-Trimethylbicyclo(2.2.1)heptane-2-spiro-4'-(2'-isopropyl-1',3"-dioxane)	C ₁₆ H ₂₈ O ₂	188199-50-0
3	4-[6-[4-(1,5-Disulfo-2-naphthylazo)-2-methoxy-5-methylphenylazo]-5-hydroxy-7-sulfo-2-naphthylazo]-4,5-dihydro-5-Oxo-1-(4-sulfophenyl)-1H-pyrazole-3-carboxylic acid, mixed lithium and sodium salts	(C ₃₈ H ₂₈ N ₈ O ₁₇ S ₄) · xLi · xNa	9522
4	Mixture of 2-(2,2,7,7-tetramethyltricyclo [6.2.1.0(1,6)] undec-5-en-5-yl propan-1-ol and 2-(2,2,7,7-Tetramethyltricyclo [6.2.1.0(1,6)] undec-4-en-5-yl propan-1-ol	C ₁₈ H ₃₀ O	9523
5	Mixture of 1-cyclooct-3-enyl-ethanone and 1-cyclooct-1-enyl-ethanone	C ₁₀ H ₁₆ O	9524
6	9-Decenyl (E)-3-(2-hydroxyphenyl)-2-propenoate	C ₁₉ H ₂₆ O ₃	238402-46-5
7	2-Cyclohexylidene-2-o-tolylacetoneitrile	C ₁₅ H ₁₇ N	916887-53-1
8	N-(4-cyanomethylphenyl)-2-isopropyl-5-methylcyclohexanecarboxamide	C ₁₉ H ₂₆ N ₂ O	852379-28-3
9	Sec-Butyllithium	C ₄ H ₉ Li	598-30-1
10	2-Tert-butyl-5-methyl-2-propyl-2,5-dihydrofuran	C ₁₂ H ₂₂ O	871465-49-5
11	(1R,2S,5R)-N-(2-(2-pyridinyl)ethyl)-2-isopropyl-5-methyl cyclohexanecarboxamide	C ₁₈ H ₂₈ N ₂ O	847565-09-7
12	5-[8-[4-(4-[7-(3,5-Dicarboxyphenylazo)-8-hydroxy-3,6-disulfonaphthalen-1-ylamino]-6-hydroxy-[1,3,5]-triazin-2-yl]-2,5-dimethylpiperazin-1-yl)-6-hydroxy-[1,3,5]-triazin-2-ylamino]-1-hydroxy-3,6-disulfonaphthalen-2-ylazo]-isophthalic acid, mixed sodium/ammonium salt with some free acid	C ₄₈ H _{31.6} N ₁₄ O ₂₄ S ₄ · 3.5Na · 2.9NH ₄	151151-35-8
13	1-Methyl-3-(2-methylpropyl)cyclohexanol	C ₁₁ H ₂₂ O	215231-33-7
14	2-Ethyl-N-methyl-N-(3-methylphenyl)butanamide	C ₁₄ H ₂₁ NO	406488-30-0
15	5-Methyl-2-(2-methylpropyl)-1,3-dioxane (cis:trans=80:20)	C ₉ H ₁₈ O ₂	9525
16	Cyclopropanecarboxylic acid 2-methyl-2-(1,2,4-trimethylpent-2-enyloxy)propyl ester	C ₁₆ H ₂₈ O ₃	676532-44-8
17	1-Eicosanol and 1-docosanol, reaction with phosphoric anhydride, alcohol/anhydride≈4:1	ROP(O)(OH) ₂ and ROH, R= C ₂₀ H ₄₁ and C ₂₂ H ₄₅ (saturated alkyl)	9526
18	Chromium, [3-(hydroxy-κO)-4-[2-[2-(hydroxy-κO)-1-naphthalenyl]diazenyl-κN ¹]-7-nitro-1-naphthalenesulfonato(3-)]-, reaction Products with 6-amino-4-hydroxy-2-naphthalenesulfonic acid, 2-[(4-aminophenyl)sulfonyl]ethyl hydrogen sulfate, diazotized 2-amino-4-nitrophenol	C ₄₇ H ₂₆ ClCrN ₁₁ Na ₃ O ₁₆ S ₃	879214-58-1

	and 2,4,6-trichloro-1,3, 5-triazine, sodium salts		
19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reaction products with alkene	-	9514
20	1 <i>H</i> -Imidazolium, 1,3-di-substituted, alkyl sulfate (1:1)	-	9515
21	1,3-Benzenedicarboxylic acid, 5-substituted-, 1,3-dialkyl ester, metal salt	-	9516
22	Halogenated aryl diazonium dichloride, reaction with acyl anilide, acyl benzenesulphonate potassium, aryl substituted pyrazolone, aniline and amino hydroxybenzoic acid	-	9517
23	Polyol Esters with mixed fatty acids	-	9518
24	Tetra-alkyl- <i>m</i> -xylene-diol	-	9519
25	Tetra-alkyl- <i>p</i> -xylene-diol	-	9520
26	Amidoalkyl dialkyl ammonio acetate, inner salt	-	9521
27	Alkyl phosphonate	-	9527
28	Modified epoxy resin	-	9528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linked.com/news/chemical-news/28-substances-added-chinas-existing-chemical-inventory>

© 국제환경규제 기원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10.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7월 1일부)

- 기준 위반 시 개인 벌금 최대 200위안, 기업 벌금 최대 5만 위안 -
- 즈푸바오(支付宝)재활용품 방문 수거 플랫폼 등장 -



자료원: 런민왕(人民网)

□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 정식 통과

○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 높은 득표 수로 통과

- 2019년 1월 31일 제15회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이 높은 득표 수로 통과돼 올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 2017년 정식 입법된 이 조항은 2018년 9월 25일 상하이 정부가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이하 상무위원회)에 정식 제출함. 수차례 수정 후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27일 정식으로 중국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두 번의 회의에 거쳐 높은 득표 수로 정식 통과됨.(조항 원문: <http://lhrs.sh.gov.cn/sites/ShanghaiGreen/dyn/ViewCon.ashx?ctgId=817ae955-cd73-4602-90c3-402a6e9f1608&infId=2e6f9079-32c7-42e0-a948-dba24ba5b14d>)

- 법안 통과로 상하이의 수년에 걸친 생활 쓰레기 관리 실천과 경험은 결실을 얻음. 지방정부의 입법에 생활 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송, 처리 등 모든 분리 과정을 제도화해 생활 쓰레기 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주체와 처벌 대책을 명확히 함으로 상하이 생활 쓰레기 관리가 정식으로 제도화, 법치화 시대에 들어섬.

○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법 발전사

- 2000년 상하이는 국가주건부(国家住建部)에 의해 전국 8개 쓰레기분리수거 시범 도시에 선정됨.(다른 7개 도시는 각각 베이징, 난징, 항주, 꾸이린, 광저우, 선전, 샤먼)

- 2014년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생활쓰레기분류감량방법》(《上海市促进生活垃圾分类减量办法》)을 발표함.

- 2018년 상하이녹색화도시관리국(上海市绿化市容局)에서 <상하이생활쓰레기전과정분류체계건설행동계획>(《上海市生活垃圾全程分类体系建设行动计划(2018年-2020年)》)을 발표함.

○ 상하이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 주임 덩웨이(董卫)가 밝힌 바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분리 관리는 체계적이고 완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는 오직 쓰레기 투기 환경에 집중했을 뿐임. 하지만 진정한 생활 쓰레기 관리의 실현은 버리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까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쓰레기의 '근본적인 감소'와 쓰레기의 '자원화 활용'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임.

□ 상하이 생활 쓰레기 관리조항의 세부 내용

○ 사분법(四分法)을 이용한 쓰레기 분류

- 본 조항은 생활 쓰레기를 각각 재활용품, 유해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총 네 종류로 구분하는 '사분법(四分法)'을 생활 쓰레기 분류의 기준으로 정함. 2011년 처음 만들어진 사분법은 입법 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상하이 시민이 사분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혀냄.

- 본 입법은 '사분법'을 확정 및 유지함과 동시에 각 생활 쓰레기 종류의 명칭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구체적 예를 들어 쓰레기 종류에 대해 설명함.

- 생활 쓰레기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경제 발전수준, 생활 쓰레기 특성과 처리방법에 따라 조정됨.

상하이 생활 쓰레기 분류기준

분류	내용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직물 등 재활용 가능한 생활 쓰레기
유해물	건전지, 등, 약, 페인트 및 용기 등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 조성에 잠재적 위험이 되는 생활 쓰레기
젖은 쓰레기	식재료, 잔반, 유통기한 지난 음식, 화훼, 한약재 찌꺼기 등 썩기 쉬운 쓰레기
마른 쓰레기	재활용, 유해물, 젖은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 쓰레기

자료원: 상하이 녹색도시화관리국

상하이시 생활 쓰레기 분류표식(유해물, 재활용품,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자료원: 상하이시 발표

○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일회용품 제공 규제

- 택배업체가 상하이에서 영업하기 위해 업체는 전자 송장과 에코백, 친환경 고무 등 친환경 포장을 반드시 구비해야 함. 택배기사에게 반복 사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 사용이 권장됨.
- 전자상거래업체가 상하이에서 일하기 위해 업체는 다양한 규격의 포장지, 반복 사용 가능한 포장봉투 등 친환경 포장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격 혜택 등 소비자가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기관은 물품 구매 시 규정에 따라 반복 사용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기업과 사회단체에 사무용품 반복 및 절약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함.
- 식품서비스업체는 영업 장소에 절약표식을 반드시 붙여야 하고 소비자가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주의해야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의 식기를 제공하는 식품서비스업체 또는 식품배송업체는 시장감독관리부문(市场监管部门)이 제시한 기한 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숙박업체는 객실에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음.(필요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 제품 제공).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숙박업체는 문화여행부문(文化旅游部门)이 제시한 기한 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완전한 과정의 분류 실행: 투기, 운송, 수거, 처리

- 생활쓰레기분류투기관리책임자제도(生活垃圾分类投放管理责任人制度)를 실행함. 관리책임자는 주민의 분리수거를 감독하고 분류기준을 어기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쓰레기 수거 지점으로 운송이 필요한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분류 후 운송해야 함.
- 수거 및 운송회사는 업계에서, 운용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함.
 - 전문차량, 선박을 이용해 생활 쓰레기를 분류 후 운송해야 함. 전용차량, 선박은 운송하는 쓰레기 종류를 명시해 밀폐운송함과 동시에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함.
 - 위험폐기물, 공업폐기물, 건축 쓰레기 등을 이미 분류한 생활 쓰레기에 섞어 수거 및 운송할 수 없음.
 - 중계 운송이 필요한 생활 쓰레기는 해당하는 중계지점에 운송되어야 함.
- 유해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처리업체는 분류기준에 따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 중 생활 쓰레기 분류기준을 어겼다면 처분자에게 조정을 요구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쓰레기 수거 자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 혹은 구 녹색도시화부문에 보고해 즉시 협조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완전한 재활용체계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 시, 구 녹색도시화부문은 완전한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쓰레기 재활용 업체 및 기타 재활용품 자영업자에게 재활용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시·녹색도시화부문은 관련 부문에 쓰레기 재활용 지도 목록을 만들고 저가 쓰레기 재활용 복지 정책을 제정해야 함.
-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활용 등의 활용을 장려해 재활용 쓰레기 투기 및 매도의 편리성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인터넷, 모바일 APP 등을 활용해 재활용 기업에 수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녹색도시화부문 등 관련 부문은 2019년 말 누계 8000개의 재활용 쓰레기 서비스 지점, 170개의 중계지점과 10개의 구 단위 집산장(集散場)을 건설할 계획임.
- 시, 구·녹색도시화부문은 규정에 따라 재활용 수거점, 중계지점, 집산장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이 상하이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송 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2020년 말까지 상하이 재활용 자원의 재활용률은 35%에 달할 것이며 젓은 쓰레기 처리량은 약 일 7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전 국민 참여 유도, 상벌 분명

-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과 공회(工会), 공청단(共青团), 부련(妇联)등의 사회단체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전 사회의 생활 쓰레기 관리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녹색도시화, 생태환경 등 부문은 생활 쓰레기과를 설립해 교육기지를 마련하고 사회에 생활 쓰레기 분류방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해야 함. 교육부문은 생활 쓰레기 분류지식을 유치원 및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생활 쓰레기 분류 교육과 실천 등을 추진해야 함.
- 마일리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생활 쓰레기 분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원 조직과 지원자를 늘려 생활 쓰레기 분류의 선전, 시범 운영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개인이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유해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젓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를 섞어서 버릴 경우 성관집법부문(城管执法部门)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50위안 이상 200위안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회사가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적합하지 않은 용기에 생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성관집법부문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생활 쓰레기 관리책임자가 생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위반해 운송하면 성관집법부문의 명령으로 즉시 조정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다양한 형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하는 상하이

- 상하이시, 즈푸바오 '재활용품 방문 수거 플랫폼(垃圾分类回收平台)'시범운영
 - 상하이시 즈푸바오 '쓰레기 방문 수거 플랫폼'을 시범 운영함. 이 플랫폼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원이 재활용품을 방문수거하고 계량 후 돈으로 바꿀 수 있음. 2018년 11월 첫 등장 이후 이 기능은 3개월이 넘게 운영 중이며 상하이 2만 개 주거지의 주민이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방문 수거는 매우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우선 즈푸바오를 열어 '도시 서비스(城市服务)'에 들어가 '재활용품 방문 수거(垃圾分类回收)'를 선택하고 프로그램 메시지에 따라 방문 주소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 수거원이 방문함. 수거원이 무게를 재고 해당 쓰레기의 가격을 매긴 후 쓰레기 판매 소득은 자동으로 계정으로 입금됨. 또한 저렴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따라 '에너지(能量)'라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음. 예를 들어 1kg짜리 플라스틱 병은 1kg의 '에너지'로 바뀌어 이후 즈푸바오 환경보호몰(环保商城)에서 모아둔 에너지로 직접 물건 구매하거나 구매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즈푸바오는 현재 두 종류 재활용품 방문수거 서비스를 주요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첫 번째는 낡은 가정용 전자제품으로 상하이 2만 여 거주지역에 제공됨. 두 번째는 폐지, 유리, 금속, 식물 등 생활 쓰레기로 현재 징안구(静安区),펑푸가(彭浦街道), 장닝가(江宁街道)등 100여 개 거주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서비스 범위는 앞으로 지속해서 넓혀갈 예정임.

즈푸바오 재활용품 단가 화면과 '에너지'교환 화면



자료원: 봉황망(凤凰网)

○ 길거리에 등장한 예술쓰레기통(文艺垃圾桶)

- 최근 독특한 쓰레기통이 상하이 홍코우구(虹口区)모 주택가에 등장해 주민의 이목을 끄. 이 쓰레기통에 의해 거주민의 쓰레기 분류 의식과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짐.
- '마지막 1km'로 명명된 이 쓰레기통은 밝은 색상과 직관적인 외관을 가진 쓰레기통으로 쓰레기까지의 거리가 눈금으로 표시된 유도선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게 함.

'마지막 1km'로 명명된 쓰레기통



자료원: 런민망

○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된 쓰레기 분류법 교본

- 2018년 12월 상하이녹색도시화국과 시 교위연합(教委联合)은 상하이 최초의 통일된 생활 쓰레기 분류법 교본을 출간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세 가지 판본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연령 학생의 필요에 따라 관련 지식을 전파함.

- 중학교 교본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생활 쓰레기인지, 가정·학교·공공장소 등 각 장소에서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류법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인지 등의 소개와 더불어 독일·일본·스위스 등의 쓰레기 분류 경험을 소개함. 충밍(崇明)등 일부 구는 이미 쓰레기 분류법을 학교 과정에 편입함.

상하이시 최초의 생활 쓰레기 분류법 교본



자료원: 상관

□ 전망

○ 인민대회대표, 시녹색도시화관리국 부서기 추이리핑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상하이생활 쓰레기관리조항>를 둘러싼 20개 이상의 관리방법과 세부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할 것.이 중 기업 감독, 심사 및 관리방법이 포함돼 만약 기업이 분리수거, 운송, 처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성신시스템(诚信系统)에 기록될 것이며 대부분의 세부사항은 올해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힘.

○ 2019년 상하이는 <상하이생활쓰레기관리조항>의 실시를 위해 생활 쓰레기 분류 구역을 상하이 전체로 확대함. 70% 거주지역에 생활 쓰레기 분리 실현, 1만 7000개 거주지역 분리수거함과 쓰레기 투기지 개조 추진, 젓은 쓰레기 차량 900여 대 배치, 유해물 운송 차량 17대 배치, 상하이 마른 쓰레기 1일 평균 2만 1000톤 미만 유지, 젓은 쓰레기 분류 1일 평균 5520톤 초과, 재활용쓰레기 수거량 1일 3300톤 초과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임.

○ 상하이는 '거주지역 재생자원 수거시스템'과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운송시스템'의 합병을 추진 중이며 합병 후 현존 시스템인 녹색계정(绿色账户)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관리 플랫폼 설립하고 동시에 재활용품 집산장 건설을 추진 중임. 즈푸바오 재활용품 방문수거 플랫폼, 쓰레기 분류 사무소 설립, 쓰레기 분류 교본 교과과정 편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상하이 생활의 새로운 규범이 될 것임.

자료원: 상하이녹색도시화관리국, 상하이 발표, 런민왕, 상관, 평항왕,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2019-02-25 장덕환 중국 상하이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1. 美 국제무역위원회, 수입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제조 측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 2월 19일 제조장 접수해 국제무역위원회(ITC) 반덤핑 조사 개시

- 미국 아세톤 생산 기업 3곳 AdvanSix, Altivia Petrochemicals, Olin Corporation은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조장을 접수

- 제조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조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조업체 주장 덤핑마진

순위	국가	덤핑마진
1	남아공	12.83~410.22%
2	스페인	124.49~200.94%
3	싱가포르	48.96~200.29%
4	한국	113.46~176.61%
5	벨기에	35.76~85.96%
6	사우디아라비아	40.08~75.11%

자료원: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모든 등급의 액체 또는 수성 아세톤이며 다른 명칭으로는 propan-2-one, beta-ketopropane, ketone propane, methyl ketone, dimethyl ketone, DMK, dimethyl carbonyl, propanone, 2-propanone, dimethyl formaldehyde, pyroacetic acid, pyroacetic ether, pyroacetic spirit 등이 있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2914.11.1000와 2914.11.5000임.

○ 향후 일정

- 상무부는 3월 11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4월 5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늦어도 9월 17일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1월 3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힘.

-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밝히면 ITC는 2020년 3월 16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은 한국, 벨기에, 남아공, 대만, 스페인 순

○ 2015~2017년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현황

- 해당 HS 코드 2914.11기준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수입량은 2015년에 2724만 달러, 2016년에 1230만 달러, 2017년에 3705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2.09%로 1위를 기록함.

- 2017년 기준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됨.
-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율은 201.2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2015~2017 미국의 아세톤 수입 통계(HS Code 2914.11기준)
(단위: US\$,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17/16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0	총계	66,106,534	52,011,245	115,438,327	100.00	100.00	100.00	121.95
1	한국	27,243,492	12,296,879	37,046,081	41.21	23.64	32.09	201.26
2	벨기에	674,175	14,934,049	31,454,384	1.02	28.71	27.25	110.62
3	남아공	15,339,080	12,355,598	17,256,941	23.20	23.76	14.95	39.67
4	대만	6,257,960	4,734,172	15,353,256	9.47	9.10	13.30	224.31
5	스페인	1,099,151	3,136,445	7,336,872	1.66	6.03	6.36	133.92
6	사우디아라비아	0	0	3,610,226	0.00	0.00	3.13	0.00
7	싱가포르	14,791,846	1,436,314	2,723,035	22.38	2.76	2.36	89.5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미국의 아세톤 수입 시장 규모는 1억1544만 달러 규모이며 전년대비 121.95% 증가했음.

□ 시사점

○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만약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조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자체발동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

○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2019-02-25 Charlie Chung 미국 워싱턴무역관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12.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

- 캐슈넛에 이어 커피도 가공 전 수출 금지 -
- 가공 수요 급증이 예상되나 공급 시설은 부족 -

□ 탄자니아 정부, 가공 전 캐슈넛 수출 금지 시행

○ 탄자니아는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아프리카 4위 캐슈넛 생산국이자 세계 8위 생산국

- 수출 금지 조치 전 가공 전 캐슈넛(raw cashew nuts)을 통한 외환 수익은 담배, 커피, 목화, 차(茶) 등 다른 주요 현금 작물을 합한 액수 초과

· 2017년 탄자니아 외환 수익(US\$ 백만): (캐슈넛) 340.9, (커피, 목화 등 다른 현금 작물) 270

- 탄자니아 캐슈넛 수출량은 전체 동아프리카 수출량의 75% 이상
- 가공 전 캐슈넛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수출돼 가공 과정을 거침.

○ 2018년 11월 수출 금지 조치로 캐슈넛은 국내가공을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해짐.

-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를 더해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하기 위함.
- 기존에는 생산량 중 90% 이상이 수출됐으며 국내 가공량은 10% 미만
- 탄자니아 내에는 23개의 캐슈넛 가공 공장이 있으나 8개 공장이 운영 중(2018년 12월 기준)

○ 수출 금지 조치로 연 6억 달러의 외환 손실 예상

- 2018년 캐슈넛 수출액은 전년대비 62.8% 감소(BoT)
 - 캐슈넛 수출액(US\$ 백만): (2017) 530 -> (2018) 197
- 2018년 11월 한 달 간 5억 달러의 외환 손실 발생
- 2018년 11월 국제수지 적자는 한 달 전인 10월 대비 338.8% 증가(BoT)
 - 국제수지 적자(US\$ 백만): (2018년 10월) 172 -> (2018년 11월) 753
- 달러 가치 상승으로 2018년 3분기 1달러 당 2200실링이던 환율이 2019년 1분기인 현재 2300실링 후반대까지 상승

○ 정부는 2018년 11월 생산자들로부터 22만 톤의 캐슈넛을 구매했다고 발표

- 캐슈넛산업이 민간산업에서 정부운영산업(Operation Koroshu)이 됐음을 시사
- 이 캐슈넛들 역시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 수출 가능
- 생산자들 보호 차원에서 기존 캐슈넛 가격을 94% 인상해 구입
 - 캐슈넛 가격(US\$/1kg): (기준가) 0.65 -> (구매가) 1.80
 - 생산자들은 낮은 캐슈넛 판매가로 인한 적자 증가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 캐슈넛 상인들은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캐슈넛 구입 불가, 정부(CPB : Cereals and Other Produce Board of Tanzania)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
 - 캐슈넛 가격 상승으로 유통 및 수출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 타격 예상
- 향후 캐슈넛 수출을 위해서는 캐슈넛위원회(CBT : Cashew Board of Tanzania)로부터 인증 필수



자료원: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체 조사

- 정부는 캐슈넛 가공 기술을 보유한 현지 및 외국기업과의 협업 의사 표명
- 탄자니아농업개발은행(TADB) 관계자는 “정부의 캐슈넛산업 보호 조치에 따라 농업개발은행도 캐슈넛 가공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했음.

□ 캐슈넛에 이어 가공 전 커피 수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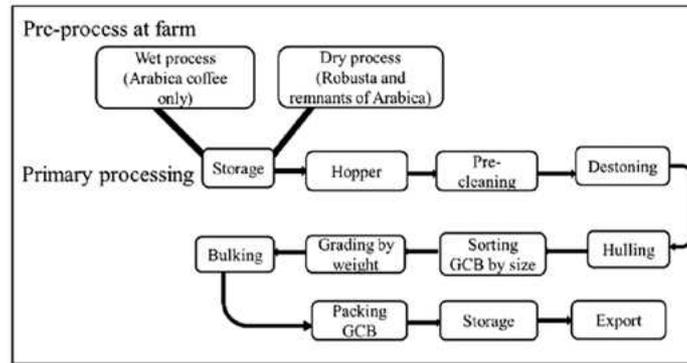
- 탄자니아 커피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인구의 7%인 56만 명으로 추정
 - 커피 직접 생산자인 45만 가구의 소작농들을 비롯해 가공 및 유통업 종사자 포함
 - 2018/19 시즌 생산량은 전 시즌인 2017/18 시즌 생산량 대비 20% 가량 증가한 2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잉여 생산량은 최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FAS)
- 탄자니아 정부, 2019년 1월 발표로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국내 가공 후에만 수출이 가능해 짐.
 - 가공 전 캐슈넛 수출 금지 조치(2018년 11월)와 더불어 상품 작물에 부가가치를 더해 높은 가격에 수출하기 위함.
- 탄자니아는 아라비카(Arabica)종과 로부스타(Robusta)종을 모두 생산
 - 마일드 아라비카는 전체 생산량의 70%, 하드 아라비카 및 로부스타가 30%이며 각각 습식 방식(Wet process)과 건조 방식(Dry process)에 따라 가공됨.
 - 습식 방식: 커피 열매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 뒤 원두를 수조에 넣어 발효시키는 가공 방식
 - 건조 방식: 커피 열매를 햇빛에 건조시키는 전통적인 가공 방식

탄자니아 주요 커피 생산 지역



자료원: Tanzania Coffee Board

탄자니아 커피 가공 과정



자료원: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31742631_Personal_Exposure_to_Dust_and_Endotoxin_in_Robusta_and_Arabica_Coffee_Processing_Factories_in_Tanzania

- 탄자니아의 2018/19 시즌 수출은 전 시즌인 2017/18 시즌 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FAS), 가공 전 커피 수출 금지 조치로 수출 증가 불투명
 - 가공 전 커피 수출액은 전체 커피 수출액의 97.5%
 - 캐슈넛과는 달리 가공 후 커피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바 있어 수출 타격은 캐슈넛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커피 가공 후 남는 껍데기와 껍질도 수출하고 있어 이 또한 커피 가공산업에 부가 가치로 작용

가공 유무에 따른 커피 수출액
(단위: US\$ 천)

품목(HS CODE)	2015	2016	2017
볶지 않은 커피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1)	155,005	150,713	124,055
볶은 커피 중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1)	2,368	853	2,015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등 (090190)	467	414	1,098

자료원: ITC

- 정부는 수출 금지 조치와 더불어 생산량 증가 방안도 함께 제시
 - 2월 말까지 한 블록 당 20만 개 이상의 묘목을 심어야 하며 농업부에서 감찰 실시 예정
 - 커피 생산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농업협동조합(AMCOS) 강력 처벌
 - 생산된 커피에 대한 투명한 관리
 - 커피 생산량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및 Moshi, Kagera, Songwe, Ruvuma 등 특정 지역에서만 경매 허용

- 정부는 현지기업들에게 국내 커피 가공시설 설립 장려 중

□ 시사점

- 농업은 탄자니아의 최대 산업으로 수출의 60%, GDP의 40%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인구의 80%가 종사
 - 이 중 7대 현금 작물인 캐슈넛과 커피는 각각 탄자니아 수출 2, 5위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12.9%와 3% 차지
 - 정부는 국가 주요산업인 농업 분야 발전 및 보호 시행 노력 중이며 그중 현금 작물인 캐슈넛산업과 커피산업에 대한 조치 가시화

- 전통 수출 작물인 캐슈넛과 커피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작된 바 향후 새로운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유지 필요
- 캐슈넛 및 커피 가공 시설 투자 확대 전망
 - 탄자니아 수출 2위 품목이던 캐슈넛 수출 타격으로 달러 소득이 급감해 정부 차원에서 가공시설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
 - 경제특구(SEZ)에 입주해 인센티브 수혜 가능
 - 가공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수출 가능
- 농식품 가공업 장려 초반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해 자리를 선점할 필요 있음.

자료원: The Guardian, Daily News, The Citizen 등 현지 언론 및 TCB, USDA, NCA, ITC 외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2019-02-25 한지현 탄자니아 다레살람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3. 인도네시아, 2019년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참관기

- 한국 업체 총 9개사, 참관바이어 총 53개사 참가-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해당 인증 여부가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바이어 의견이 지배적 -

MUI 할랄 인증 로고를 부착한 인기 가공 식품



자료원 : Hargajoss, Bukalapak, Tokopedia, Kontan, Deskgram,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 행사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은 생활소비재 취급업계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며, 우수 글로벌 브랜드 제품 및 인도네시아 인기 한류 상품은 할랄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임.
- 할랄 인증은 아직까지 의무인 상황은 아니나, 2019년 10월부터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제품의 할랄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MUI 할랄 인증을 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19년 1월에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인 MUI 인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LPPOM-MUI와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 제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될 종교부 산하 할랄 제품보장청(BPJPB)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사항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음.

* 관련 KOTRA 해외시장뉴스 링크 :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좌측 뉴스 제목에 커서를 대고 클릭 후 열람가능)

○ 이어서 2019년 2월에는 전라남도청과 KOTRA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전남 할랄식품 무역사절단을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역사절단 행사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행사명	2019년 전남 할랄식품 무역사절단(인도네시아)
개최 일시	2019년 2월 19일 (화) 09:00~17:00 (참고 : 말레이시아의 경우 2월 21일 전일 상담회 진행)
개최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참고 : 말레이시아의 경우 쿠알라룸푸르 시내 상담장에서 진행)
분야	할랄 식품 및 할랄 인증 대상 생활소비재
개최 목적	○인도네시아는 할랄 거대 시장으로서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외식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인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할랄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
참가업체 수	9개사(제이에스코리아, 해남고구마, 영산홍어(주), 바다향기 등)
참관바이어 수	53개사(JD.ID, TTS ABADI, PT KORINUS 등)
주최 및 주관 기관	KOTRA, 전라남도청

□ 행사 내용

○ 2019년 2월 18일에 참가사들과 전라남도청 관계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마케팅 담당자와의 사전 간담회가 있었고, 2월 19일에는 우리 참가 기업 9개사와 인도네시아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 53개사가 수출 상담회를 진행

○ 상담회 참석했던 기업들의 제품은 소금 제품, 이유식, 유기농 식품, 고구마 및 망고 말랭이, 조미김 등이었음.

○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관심있어하는 한국의 제품에는 고추장, 누룽지,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인스턴트 면, 김, 각종 간식, 패션 제품 등이 있었음.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전남 할랄 식품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전경



미팅 장소

외부 전경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직접 촬영

□ 주요 참가기업 및 바이어 반응 조사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한국 및 할랄 제품 및 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 업계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미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음.

○ 주요 참가 기업의 수출상담회 현장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음.

업체	취급 품목	업계 반응
A사	식용 및 미용 소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로 비즈니스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가 소금과 천일염 시장에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인도네시아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1억 5천만명이며 시장 잠재성이 큰 국가임. ○반면, 인도네시아는 수입에 대한 규제가 크고 관세 또한 부담으로 남아있어 통관이 쉽지 않은 것이 진출 애로사항으로 보임.
B사	이유식, 유기농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단 인도네시아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반면, 인도네시아로 진출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은,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 ○ 이 수출상담회에서 바이어를 만나본 결과, 인도네시아는 아직 건강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건강에는 좋은 상품이나 맛이 덜하다고 느껴지면 인니 시장에서 약간 불리할 수 있을 것임. ○이를테면 nestle 브랜드 상품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는데, 바이어들이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해당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음.
C사	건과일 스틱, 군고구마말랭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있으며, 현지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품종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했음. ○이에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D사	조미김, 구이김, 마른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시장은 베트남 시장과 함께 시장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의 장점은 한류로 인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임. ○한편으로는, 우리 사가 아세안 내 타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할랄 인증 뿐 아니라 통관 과정, 식약청 인증 등 수출 과정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보여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

○ 주요 바이어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업체	관심 품목	업체 반응
E사	고추장, 고춧가루, 누룽지 등 한국 식품 전 반 및 화장품류	<p>○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주로 화장품류를 한국에서 수입함.</p> <p>○한국제품의 특징은 이를 테면, 기초화장품의 경우 클렌징부터 보습까지 단계가 나뉘져 있고, 단계별로 제품의 강점이 다른데 이는 한국 제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징임.</p> <p>○ISO 22716, cGMP, CFS 등 한국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수출 및 제조업자 서류가 더욱 철저히 준비됐으면 함.</p> <p>○우리 기업은 식품보다도 화장품에 더 관심이 많으며, 화장품류에서는 마스크팩과 쿠션제품을 수입해보고 싶음.</p> <p>○할랄 인증이 스킨케어와 같은 뷰티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나, 음식의 경우 할랄 인증이 있었으면 함.</p> <p>○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다수가 무슬림이므로 할랄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p> <p>○참고로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품질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음.</p>
F사	인삼, 죽염, 동충하초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소비재	<p>○우리 기업은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으며, 이는 한국 제품이 대체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이며, 한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인이 사용하기에도 적절하고, 한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임.</p> <p>○또한 한국제품은 특색이 있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음</p> <p>○반면 가격이 비싼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음.</p> <p>○할랄과 관련,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은 주로 화교나 인도계 고객이 구입하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어보임.</p> <p>○우리 기업은 제품을 수입하기에 앞서서 제품의 원산지 및 성분을 면밀히 검토하며, ISO, GMP와 같은 인증을 받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p>
G사	인스턴트 면, 조미 김 등 한국 가공 식품	<p>○우리 회사는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임.</p> <p>○한국 제품은 중국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은 반면, 한국 거래사들 사이에서 할랄에 대한 인지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할랄 인증을 제품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보여짐.</p> <p>○현재에도 그렇듯 향후에도 한국 식품류를 수입하기를 희망</p> <p>○할랄과 관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p> <p>○우리 회사는 한국 식품을 수입할 때 맛을 먼저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식품의 기호가 맛이 인도네시아인의 입맛에 맞아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p>
H사	생활소비재 전반	<p>○우리 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한국 제품이 독창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임.</p> <p>○한국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장점인데, 단점은 눈에 띄는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점임.</p> <p>○차후 우리 온라인 몰에 스킨케어제품, 식품류, 패션 제품이 입점하기를 원함.</p> <p>○할랄 인증과 관련,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이 있으면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임</p> <p>○우리는 제품의 모조품 여부를 면밀히 통제하여 진품만을 입점시키고 있음.</p>
I사	뷰티제품	<p>○한국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이 많음.</p> <p>○한국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성 성분이 좋고, 두번째로는 품질이 좋으며, 세번째로는 가성비</p>

		<p>가 뛰어난 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제품은 친환경 재료를 다른 국가 제품보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제품은 패키징 또한 독창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됨. ○한편, 수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가 많은 것이 제품 수입과 관련한 어려운 점이라 생각되며 이는 한국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제품에 해당됨. ○향후, 이미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제품군보다는 인도네시아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제품을 구매하길 원함. ○할랄 인증과 관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제품군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으로 생각됨. ○한편,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화장품은 유럽 화장품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우리는 제품을 수입할 때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임.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

□ 시사점

○ 우리 기업인이 보기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윤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에 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

○ 한편 우리 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은 시장성에 비해 진출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단점으로 다가옴.

- 특히 할랄도 완제품에 대해서는 교차인증이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만 인정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통관, 관세 등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어렵게 느껴짐.

○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한국 제품 선호하는 주요 원인에는 독창적이고 품질이 좋은 점으로 보임.

○ 한편 바이어들의 취급 품목 및 해당 제품에 대해 주요 소비자가 어느 계층 또는 어느 민족인지에 따라 할랄 인증의 필요성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음.

○ 주요 취급 상품이 식품인 경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강조했으나, 화장품 업체에서는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편이 아니었음.

○ 그럼에도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바이어들은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할 수 있음을 언급했음.

○ 새로 도입되는 할랄 제품 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바이어와 참가사가 언급하지 않았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나 우려는 생각보다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상위법인 Law No.33 Year 2014 의 58조부터 68조에는 할랄 제품 보장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에 대해 명시되었음.

- 또한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품목별로 도입 또는 유예 기간에 차등을 둘 예정이라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으며, 해당 법령의 시행령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은 관련 업계에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한국 판매기업에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들이 수출에 앞서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서류들을 더 철저히 준비할 것을 언급했음.

현장 인터뷰 및 자료 작성 보조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여경, 박주연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종합 및 업계 인터뷰 내용

2019-02-27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출처 (KOTRA해의시장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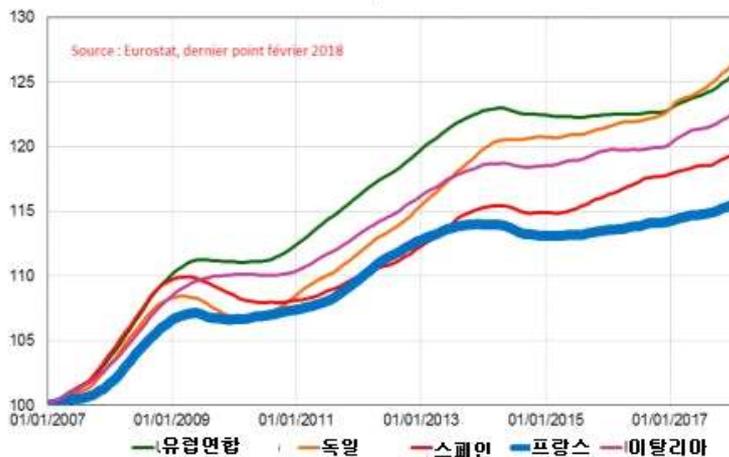
14. 프랑스 정부, 농민 수익 위해 식품 유통 법 제정

- 유통업체 간의 극심한 가격경쟁을 진정시키고 상품의 질적 수준 향상시킬 목적
- 일명 식품법(Loi Egalim)으로,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
- 법안 발효의 여파로 식품가격 최대 4%까지 상승

□ 배경 및 의도

- 최근 몇 년 사이, 프랑스 내 대형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 극심
 - 대형유통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손해를 보며 프로모션을 하는 일이 거듭됐고, 업계 내 불화가 조장됨.
 - 공급자와 유통업체 사이의 비정상적인 가격 협상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가 유독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 정부가 나섰다.

국가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2007~2018)



자료원: Eurostat

○ 최근 10 여년 동안의 유통과정 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2013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음.

- 유통업체의 가격 변화는 거의 없으나,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심한 편
- 2016년 이후 2년 동안 농산물 생산자 가격에는 약 7%의 상승이 있었으나, 대형 유통업체 가격은 약 0.6% 에 불과한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프랑스 통계청(INSEE)

○ 농민 보호 및 상품의 질적 수준 향상 목적

-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함.

-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 이 제정됐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 법안 내용

○ 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

-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 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됨.

-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까지는 최소한 1유로에 판매 됐다면, 2월 1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되어야 함.

-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가격 결정 시스템의 전환

-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생산자 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식품 프로모션 가격 제한

- 식품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함.

□ 영향

○ 가장 큰 영향은 가격변동으로, 식료품 가격이 약 4% 오르는 결과로 이어짐.

- 그동안 유통업체 마진율 0%였던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10% 인상됨.

- 프랑스 농림부에 의하면, 13,000 개의 슈퍼마켓의 500개의 상품과 하이퍼마켓 20,000 여 곳의 상품 800여개의 가격이 약 4% 상승함.

- 코카콜라(Coca-Cola), 뉴텔라(Nutella), 리카르(Ricard), 프레지딩(Président) 브랜드의 버터와 치즈 등이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들은 반대급부로 같은 군의 자체브랜드 상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 이로서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가격 협상에서 압박이 클 전망

○ 프랑스 상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비슷한 편임.

- 생산자로부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시스템의 긍정적 영향으로,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유통업체, 제조업체, 생산자 간의 가격 협상의 수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 하지만, 가격상승의 수혜자가 생산자가 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법안의 영향으로 가격상승폭이 커진 상품들



자료원: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 전문가 의견 및 전망

○ 중소기업의 입장

-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5년동안 약 80%의 성장률을 보여왔음(리서치 그룹 Nielsen 의 조사결과).
- 식품산업 중소기업조합(FEEF)은 “이 법안으로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이 큰 다국적 기업 상품만을 취급하려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상품이나 지역 생산품, 유기농 식품 등이 점점 인기가 많은 추세인 만큼, 줄어들지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음.

- 다만, 가격인하를 위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압력으로 가격 협상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Anvancy 컨설팅사의 로랑스-안느 파랑(Laurence-Anne Parent) 은,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에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가격 경쟁을 떠나 소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상품 할인율에 대한 제재가 커져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 됨.

- 가격 프로모션 이외의 다른 마케팅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 프랑스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점점 가격보다는 유기농, 로컬푸드와 같이 품질과 친환경성으로 흐르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는 추세이며, 대형유통마켓들은 유기농 전문 매장을 개설하거나 일반매장에서도 자리를 넓히고 있음.

○ 한국기업들도 프랑스 유통망의 새로운 환경과 식품 트렌드를 고려한 진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발효식품 등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유기농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레제코(Le échos), 르피가로(Le figaro), 르몽드(Le monde), 프랑스 농림부, 프랑스 통계청, Eurostat 등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

2019-02-28 광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5. 수단, 국가 비상사태 후속조치로 4개 긴급 명령 발표

- 외화, 금, 석유, 밀의 불법 거래 및 밀반출 통제 강화 -
- 시위 통제 위해 허가받지 않은 각종 집회, 모임 금지 조치 발표 -

□ 지난 2월 22일 Bashir 대통령이 TV 담화를 통해 '1년간 전국 대상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25일 긴급 대통령 명령 4개 조치 발표

- Bashir 대통령 2월 25일 하기 4개 긴급 명령 발표, 이 조치는 즉시 효력 발휘
 - 긴급 조치 4가지는 외화, 필수품 통제 및 시위 동력 약화 위한 조치들로 당장 수출입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 수단 정보부(NISS)는 하기 조치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불안전성 확대, 이에 따른 소비 및 수입 심리 위축, 정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 발표에 대응 필요
- 무역거래에 미치는 조치는 공항 등을 통한 국경 통과 시 외화 밀반출 규모 축소(1만 달러에서 3천 달러로), 수입시 관세 적용 환율 인하 (1달러당 18SDG에서 15SDG로 인하) 정도로 당장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최근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른 비상조치 확대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점이 최대 우려 요인으로 작용.
 - * 2018년초 1달러당 30SDG 수준에서 시작한 현지화 환율은 2018.12월 60을 넘어선 이후 2월 들어 70선에서 거래, 체크 교환시 80을 넘는 상황으로 얼마까지 오를지 환율 예측이 어려운 상태임
 - * 동환율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시장환율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환율은 1달러당 47.5에 묶여 있어 실제 시장 거래환율과 큰 갭을 보이는 상황, 여기에 시장환율 역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현금, 체크 교환시 환율이 크게 다른 상황 지속
 - 환율 및 물가 폭등으로 수단 수입상들은 신규 수입 거래는 중단, 기존 수입 물량까지 보류하는 움직임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



□ 긴급 명령 3호와 4호는 외화, 금, 석유, 밀 등 필수재 통제를 위한 조치들임.

○ 긴급명령 3호(2019년 유효) : 외화, 금의 통제와 이동에 관한 명령, 이는 외화, 금 등에 대한 불법 거래 및 밀수 방지를 위한 것

- 비공식적인 외화의 매매 행위(은행이 아닌 암달러상을 통한 외화거래 금지)
- 공항, 항만, 내륙 통한 국경 통과시 3000 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 반출입 통제
- 150g 이상의 금제품(manufactured gold) 반출 통제
- 제조, 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금 원재료(raw gold)의 보관, 소유 및 이동 통제
- 어떤 형태로든 금을 소유한 자는 금의 운반과 관련 당국의 규정 준수 필요
- 상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 부과
- 상기 위반 대상 외화 및 금은 내국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압류 또는 몰수

○ 이외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친정부 성향 신문인 Sudan Vision은 아래와 같이 보도

- 수단 경총회장은 2월 25일 신임총리인 Eila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면담에서 비상 사태 선포후 정부에서 수입 통관시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 달러당 18SDG에서 15SDG로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현지화 환산 관세 절감 효과)

○ 긴급명령 4호(2019년 유효) : 오일 등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물자의 유통, 보관, 판매, 운반 관련 하기 사항 금지

- 정부 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오일류(디젤, 가솔린, 가스, ferns)의 보관, 판매, 운반 금지
- 오일류의 해외 반출 금지
- 모든 주유소의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석유류 판매 금지
- 모든 주유소는 주유소 외부에서의 오일류 판매 금지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밀가루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 보관 및 운반 금지
- 밀수 행위 금지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만SDG 이하의 벌금
- 영업 허가 취소 및 관련 제품의 몰수 또는 압류

□ 긴급 명령 1호와 2호는 치안 유지 및 시위동력 약화, 진압 강화를 위한 대책들로 구성

○ 긴급명령 1호: 비상사태 유지를 위한 치안 당국(군,경,정보기관) 권한 강화

- 빌딩 및 가택 진입 및 수색
- 자산, 시설에 대한 통제 조치
- 조사 및 기소 단계에 있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 상품, 및 상점에 대한 압류
- 시위대 및 시위와 관련된 차량 이동, 통신 금지 또는 통제
- 비상사태 관련 범죄 연루 의심자에 대한 체포
- 기타 비상사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긴급명령 2호(2019년 유효)

- 승인되지 않은 집회, 시위 등을 위한 모임 금지
- 도로 점거, 교통 방해 행위 금지
- 국가 시설물, 상징에 대한 훼손, 비하 행위
- 파업 및 태업 금지
- 공공 및 민간 시설, 시민에 대한 금지 및 치안 훼손 금지
- 관련 기관의 승인 받지 않은 세미나, 이벤트 모임 금지
- 국가 및 시민에 해를 끼치는 뉴스의 생산 또는 전파 금지

- 정부 당국의 명령, 지시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 금지
- 관련 당국에 의해 정해지는 통행금지 위반 금지
- 진행중인 범죄 조사에 대한 뉴스 생산 및 전파 금지
- 상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 정부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

○ 비상사태 선포(2.22) 이후에도 반정부, 대통령 퇴진, 비상사태 선포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실탄 발포로 부상자 발생

- Reuters, BBC 등 외신은 수도 카르툼, 인근 옴두르만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이후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2.24(일) 시위에서 정부측 실탄 발포로 4명이 부상 당했고, 가택 수색 및 체포, 경찰의 대학 진입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도

- 2018.12.19. 시위 발생 후 국제사면위원회 집계 사망자 45명, 부상자 180명 이상, 수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단전문가협회(SPA) 와 Umma National Party 등 야당 지도자들은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위 확대를 주창

- Cohen 美 유엔대리 대사는 “수단 비상사태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수단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압적 진압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 요구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은 비상사태 선포가 ‘수단 정부가 실탄 및 철회탄을 동원한 폭력 진압, 구금자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 라며 비상사태 종식을 촉구

- BBC는 당초 Bashir 대통령이 여당 (NCP) 당수 자리를 사임하고 2020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2.22일 담화에는 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

□ 시사점

○ 비상사태 선포 3일만에 발표한 긴급명령은 외화 및 생필품 통제 강화, 시위동력 약화를 위한 치안 유지 강화책으로 구성

- 외화 및 생필품 통제 조치는 기존 정책을 보다 세분화, 강화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얼마나 강력히 시행할지 정책 의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

- 당장 수출입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물가의 급등세가 소비, 수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시위 진압 강화책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진정되지 않는 국면으로 주요 외신은 현 상황이 Bashir 정권 31년만에 최대 위기라고 보도

○ 당장의 치안, 수입 환경에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안정성 확대로 소비, 수입 심리 위축 우려, 시장 및 정국 변화에 주목,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 : 언론 및 인터뷰 종합 (SUNA, Sudan Vision, Sudan Tribune, BBC, Reuters 등)

2019-02-28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